

EU 청정산업딜 정책 조치

• • • •

2025-03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2025-03]

EU 청정산업딜 정책 조치

Contents

I. 서론	1
II. 청정산업딜의 주요 정책 조치	3
III. 결론 및 시사점	17

* The Clean Industrial Deal: A joint roadmap for competitiveness and decarbonisation(EC, 2025.2.26.)에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

요 약

■ 오늘날 유럽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 경제 성장 둔화, 기술 경쟁 속에서 기후 위기 대응, 경쟁력 확보, 경제 복원력 강화라는 3대 과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생산성 성장 측면에서 주요 강대국에 뒤쳐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대두하고, 역내 산업 또한 높은 에너지 가격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앞에서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대응 조치 마련이 시급
- 이에 EU는 탈탄소화와 순환성을 경제 정책의 중심축으로 설정해 자원 부국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청정산업딜을 수립
 - ※ '90년~'25년 동안 EU의 순온실가스 배출량이 37% 감소한 반면 GDP는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탈탄소화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자 기회로 작용
 -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은 탈탄소화와 재산업화, 혁신을 가속화하고 유럽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조치
 -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에너지 집약 산업 ▲청정 기술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체 가치사슬을 고려해 에너지 비용 절감, 청정제품 수요 증대 등을 중심으로 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
 - ※ 순환성을 통해 폐기물 감소, 생산 비용 절감, CO2 배출 감축, 경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산업 모델을 창출하고, '30년까지 글로벌 순환 경제 주도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 수립
 - 이를 위해 ①에너지 가격 안정화 ②청정 제품 공급·수요 촉진 ③공공·민간 투자 증대 ④순환성·자원 접근성 확립 ⑤국제 파트너십 증진 ⑥스킬 및 양질의 일자리 지원의 6대 핵심 정책 방향과 세부 조치를 제시

■ (에너지 가격 안정화) 유럽의 평균 에너지 가격이 무역 상대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저가 에너지 확보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모색하는 것은 청정산업딜의 핵심 과제이자 역내 에너지 집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요소에 해당

- ※ (KPI) ①경제 전반의 전기화율을 현 21.3%에서 '30년 32%로 확대 ②'30년까지 매년 100GW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설치
- 「적정에너지가격실행계획」, 「청정산업딜 국가 보조금 프레임워크」, 「전력망 비용 권고안」 등을 수립해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전력 공급 비용 인하에 주력

- 산업 탈탄소화, 그리드·에너지 저장·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인허가 간소화 조치를 수립하고 관련 절차의 디지털화 추진
- 에너지 시장 조작을 방지하고 투명성 부족, 정보 비대칭, 시장 집중 위험과 관련된 허점을 메울 수 있도록 에너지·금융 규제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규제 감독 증진
 - ※ (예) 역내 천연가스 시장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가스 시장 태스크포스(Gas Market Task Force) 구성,

■ (선도 시장 구축으로 청정 공급·수요 촉진) 탈탄소화 제품 비즈니스 사례를 창출하기 위한 수요 측면의 구체적인 조치 수립 필요

- ※ (KPI) ① EU 시장 내 청정 기술 제품의 역내 생산 부품 비율 40% 달성 ② 청정산업딜에서 명시한 제품의 외부취약성지수(EXVI) 저감
- 「산업탈탄소화촉진법」을 제정해 에너지 집약 산업에 EU산 청정 제품 공급을 촉진하는 복원력·지속가능성 기준, 저탄소 제품 라벨제도를 도입
 - 공공·민간 조달, 각국의 지원 프로그램, EU 예산에 대한 비가격 기준* 적용 확대
 - * 환경 지속가능성, 품질 등 공공·민간 조달 등에서 평가 기준으로 삼는 가격 외 요소
 - 공공 조달 프레임워크(Public Procurement Framework)'를 개정하여 전략 부문 공공 조달 시 지속가능성, 복원력, 유럽산 우대 기준을 적용
- 저탄소 수소에 대한 위임법(delegated act)을 채택하여 실용적인 방식으로 저탄소 수소 생산 관련 규칙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들에게 확실성을 제공

■ (공공 및 민간 투자 증대) 경제 부문의 청정 전환에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인 규제 안정성, 탈탄소화 목적의 공공 인센티브, 효과적인 정책 조정을 바탕으로 민간 자본을 동원·활용하는 것이 중요

- ※ (KPI) 산업 전환 위한 총 투자 규모를 현 527억 유로 이상으로 증액
- ▲ '25년 혁신기금 중 60억 유로를 청정 기술, 배터리 제조, 수소은행, 산업 탈탄소화 등에 투자 ▲ 업계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산업탈탄소화 은행(Industrial Decarbonisation Bank) 출범
- ▲ 민간 자금 동원 수단인 InvestEU의 위험 부담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 TechEU* 투자 프로그램을 전개 ▲ 회원국 지원 강화
 - * 「경쟁력 나침반」에서 제시한 제도로, 유럽투자은행 및 민간 투자자와 협력해 혁신 지원, 역내 산업 역량 강화, 혁신 기술* 투자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

■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재·자원 접근성 확보) 신뢰도가 부족한 역내 공급업체 노출을 대폭 줄이고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재와 2차 원자재 조달에 전략적으로 접근 필요**

※ (KPI) 순환 재료 사용률을 현 11.8%에서 '30년 24%로 확대

- 디지털·녹색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를 일부 제3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이므로 「핵심원자재법」 시행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자원 접근성을 제고
- 「순환경제법」 제정, 에코디자인 요건 전면 도입, 지역순환허브 구축 등을 통해 순환경제를 저해하는 규모의 경제 문제나 단일시장 부재에 대응

■ **(글로벌 시장과 국제 파트너십 증진) 녹색 전환과 복원력,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 상당수가 역외 조달되고, 개방 무역 체제와 제3국 시장 접근성이 EU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청정산업화 달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 대두**

- 제3 시장과 필수 투입물에 대한 유럽 기업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정무역투자파트너십(CTIP)'을 발족해 FTA를 보완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효과 증대를 목표로 제도를 대폭 단순화하여 업계와 공급망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전 세계 탄소가격제 도입을 장려
- 외국인의 EU 투자가 역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직접투자(FDI) 심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채택

■ **(공정 전환을 위한 스킬 및 양질의 일자리 지원) 숙련 인력 확보가 중요한 EU 산업계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필수적**

※ (KPI) 녹색 전환에 특정 스킬·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종 중 최소 5개 회원국에서 인력 부족을 보고한 직종의 수('24년 기준 27개) 축소

- 근로자의 스킬 구비 및 고용주의 전문 인력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적인 스킬 전략으로서 '스킬 연합(Union of Skills)' 출범
- 「양질의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해 전환기에 있는 근로자 지원, 유럽세계화기금 지원 확대, 유럽공정전환관측소 설립 등 추진

■ **EU가 전 세계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며 청정기술과 관련 제조 분야의 주도권 확보 및 산업 경쟁력·경제 안보 강화를 도모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

- 현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에 입각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및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산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 미흡
 -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50년 탄소중립 사회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과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10대 부문의 37개 감축 정책 과제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기반 과제 등을 제시
 - 탈탄소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후 정책과 산업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에너지 집약 산업의 탈탄소화 및 청정 기술 육성을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전략 육성이 필요
- 청정제품 시장 구축, 금융 지원제도 개선, 인력 양성 등 EU 「청정산업딜」의 주요 조치를 국내 상황에 맞게 반영하여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
 - 국내 청정 제품 시장 구축 및 수요 창출이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공공 부문의 녹색 제품 조달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의 청정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정책 인센티브를 강화
 - ※ 친환경 제품의 공공조달 의무화, 한국형 탄소발자국 라벨 제도인 탄소성적표지제 강화 등을 통해 청정 제품의 시장 경쟁력 제고 모색
 - 청정 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EU 혁신기금, 산업탈탄소화은행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기후대응기금* 및 녹색 금융 활성화, 탄소중립 분야 세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
 - *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마련된 기금
 - 정부의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 공고화 및 관련 기술과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
 -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EU 스킬연합 등을 참고하여 산업별 직무 전환 교육, 인력 양성, 취약 지역·계층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 필요

【원 문 정 보】

- EC, The Clean Industrial Deal: A joint roadmap for competitiveness and decarbonisation, 2025.2.26

I. 서론

■ 오늘날 유럽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 경제 성장 둔화, 기술 경쟁 속에서 기후 위기 대응, 경쟁력 확보, 경제 복원력 강화라는 3대 과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생산성 성장 측면에서 주요 강대국에 뒤쳐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대두하고, 역내 산업 또한 높은 에너지 가격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앞에서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대응 조치 마련이 시급

-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기후와 순환성, 경쟁력을 하나의 포괄적인 성장 전략으로 통합하는 사업 계획으로서 업계 탈탄소화의 실현 가능성과 수익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청정산업딜'을 수립

-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은 탈탄소화와 재산업화, 혁신을 가속화하고 유럽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조치

- dragged 보고서*와 경쟁력 나침반**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탈탄소화 정책이 산업·경쟁·경제·무역 정책과 유기적으로 통합될 때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24.9) 마리오 dragged(Mario Draghi) 전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집행위로부터 의뢰받아 향후 EU의 정책 방향을 제시

** (Competitiveness Compass, '25.01) 향후 5년간 역내 경쟁력 회복 및 기업 규제 간소화 방안을 제시한 전략 프레임워크

- 집행위가 역내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생산 증진 및 '50년 탈탄소 경제 전환을 도모하는 가운데, 청정산업딜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에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혁신을 통한 탈탄소화 추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에 기여하는 제조업체 육성, 각 회원국의 기술 중립성 원칙 존중·적용을 통해 달성 가능

- 청정산업딜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에너지 집약 산업 ▲청정 기술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체 가치사슬을 고려해 에너지 비용 절감, 청정제품 수요 증대 등을 중심으로 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

* ▲(에너지 집약 산업) 높은 에너지 비용, 불공정한 글로벌 경쟁, 복잡한 규제 등으로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어 탈탄소화 및 전기화에 대한 지원이 시급 ▲(청정 기술) 미래 경쟁력과 성장의 핵심 요소로 산업 변혁에 필수적

- 역내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고 의존성을 낮추며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순환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 가능한 산업 모델을 창출할 계획

※ 순환성을 통해 폐기물 감소, 생산 비용 절감, CO2 배출 감축, 경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산업 모델을 창출하고, '30년까지 글로벌 순환 경제 주도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 수립

- 이를 위해 ❶에너지 가격 안정화 ❷청정 제품 공급·수요 촉진 ❸공공·민간 투자 증대 ❹순환성·자원 접근성 확립 ❺국제 파트너십 증진 ❻스킬 및 양질의 일자리 지원의 6대 핵심 정책 방향과 세부 조치를 제시

※ 경쟁력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단일시장 전면 활용, 디지털화 촉진, 혁신 도입 가속화, 양질의 일자리 확대, EU-회원국 간 정책 조정 증진과 같은 수평적 조치와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중요

II. 청정산업딜의 주요 정책 조치

1. 에너지 가격 안정화

■ (배경) 유럽의 평균 에너지 가격이 무역 상대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저가 에너지 확보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모색하는 것은 청정산업딜의 핵심 과제이자 역내 에너지 집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요소에 해당

-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유럽의 의존성이 에너지 가격 상승과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최근 에너지 위기와 러시아의 가스 공급 무기화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악화되는 추세
 - 현재의 지정학·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비용 상승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전기시스템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에너지 가격의 인상 요인으로 유럽의 산업 에너지 요금에 영향
 - 전력망의 상호 연결성과 인프라 미흡 및 에너지 시스템의 통합·유연성 제약 등으로 인해 저가 탈탄소 에너지원의 활용이 저해되고 위기 복원력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전기화 및 에너지 단일시장 구축을 적극 추진 필요
- 집행위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화, 역내 생산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물리적 연결을 통한 역내 에너지 시장 완성, 에너지 사용 효율화, 에너지 연합(Energy Union)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적정에너지가격실행계획*」을 채택('25.2)
 - * (Action Plan for Affordable Energy) 산업, 기업, 가계의 에너지 요금 절감 및 관련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 제시
 - 세부 조치 대부분이 회원국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바탕으로 '25년 내 이행될 예정인 가운데, 산업과 관련된 주력 분야로 ①에너지 비용 절감 ②청정 에너지 및 청정 제조 보급 가속화 ③가스 시장의 원활한 작동 보장을 제시

■ (에너지 비용 절감) 「전력 시장 설계 규정*」('24.6)에 제시된 개혁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전력 공급 비용 인하에 주력

* (Regulation (EU) 2024/174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amending Regulations (EU) 2019/942 and (EU) 2019/943 as regards improving the Union's electricity market design) EU 에너지 시장의 복원력 강화, 전력구매계약 등의 장기 계약 장려로 에너지 가격 안정화 제고 등을 도모

- 집행위는 유럽투자은행(EIB)과 함께 5억 유로 규모의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시범 프로그램을 개시하였는데, 전력구매계약(PPA)*과 차액계약제도(CfD) 확산이 청정 에너지 생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단기 시장에서 화석 연료 의존성을 낮추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
 - * 국가 간 전력구매계약 포함
 - 이에 따라 유럽투자은행은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집약 업계의 장기 전력 구매를 위한 PPA 일부에 간접 보증을 제공하는 한편, ‘그리드 제조 패키지’를 도입해 전력망 부품 제조업체에 최소 15억 유로의 간접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생산량 증대를 지원
-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산업 탈탄소화 전개, 유럽 내 청정 기술 제조 시설을 확보 등을 목표로 '25.6월까지 「국가 보조금 지급 규칙(State aid rules)」 간소화 추진
 - 회원국의 에너지 믹스 결정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관련 조약 및 기술 중립성에 의거하여 각국의 원자력 공급망·기술 보조금을 평가
 - 「국가 보조금 지급 규칙」에 따라 전력구매계약과의 통합 가능성을 포함해 차액계약제도 설계 방식에 대한 지침을 회원국에 제공하는 한편, 국가 간 선도 용량* 할당에 관한 규칙을 신설
 - * 선도용량시장 제도는 가격 변동에 대비하여 선도 계약을 통해 전력을 미리 거래하는 제도
 - 해당 규칙을 활용해 향후 산업 운영에 필요한 발전량을 확보하고 선도시장(forward market) 개발 및 장기 전기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소비자 맞춤형 상품 제공으로 청정 에너지 공급에 맞춰 전력 수요가 조정될 수 있도록 '25.4분기까지 소매 계약의 전력 소비 유연성을 보상하는 방안과 관련해 지침 개발
 - 첫 번째 단계로 「에너지과세지침*」 개정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비용 효율적 방식으로 과세 수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권고안 발표
 - * (Energy Taxation Directive) 각 회원국이 탈탄소화에 투자하는 에너지 집약 산업에 단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력에 대한 과세 수준을 낮추고 에너지와 관련 없는 정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담금을 폐지해야 하는데, 「에너지과세지침」을 통해 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한 전기세(electricity taxation)를 0으로 인하 가능
 - 전력망 요금 측면에서도 일관된 요금 체계를 설계하기 위한 권고안과 지침을 제시하고, 관련 효과를 고려해 신규 법안을 발의
- 효율적인 전력망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가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원활하게 전달됨으로써 모든 사용자가 최적의 비용으로 에너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유럽그리드패키지(European Grid Package)」 제안
 - 범유럽 에너지 네트워크(TEN-E) 단순화, 인허가 간소화, 배전망 계획 개선, 국경 간 통합 계획 및 프로젝트 실행 보장, 디지털화·혁신 촉진 등의 조치가 패키지에 포함될 전망

- 향후 수년간 천연가스가 역내 전기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행위는 회원국의 국가 보조금 정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
 - 이를 통해 각 회원국이 비상상황에서 검증된 모델을 기반으로 극단적인 가격 급등과 예외적인 가격 여건에 대처하고 높은 가스 가격이 전기 요금으로 전가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인허가 간소화) 지속적·안정적인 저가 청정 에너지 공급은 에너지 집약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를 위해 그리드·에너지 저장·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전개하기 위한 인허가 기간 단축 추진

- 다만, 현재까지 「재생에너지지침(RED-II)」에 따라 간소화된 인허가 규칙으로 전면 전환하였다고 보고한 회원국이 단 7국가에 불과하므로, 집행위 차원에서 회원국의 기존 에너지 인허가 법률 전환을 지원*
 - * 모범 사례와 권장사항 공유, 에너지 인허가에 대한 논의 개시 등
- 곧 발표될 「산업탈탄소화촉진법*」을 통해 산업계의 에너지 활용 및 탈탄소화 관련 인허가 병목현상을 해소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
 - * (Industrial Decarbonisation Accelerator Act) 역내 청정 제품 수요 증대, 주요 산업의 신속한 인허가 절차 도입 등의 조항으로 구성되며 '25년 4분기 제안 계획
 - 해당 조치는 「긴급허가규정」, 「재생에너지지침」, 「TEN-E 규정」, 「핵심원자재법」, 「넷제로산업법(NZIA)」 이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립될 전망
- 한편, 디지털화를 통해 인허가 절차가 가속화되고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집행위는 데이터 공간, 우주 기반 데이터·서비스, AI 사용을 장려하여 각종 데이터에* 대한 회원국 기관의 접근성을 용이화하여 의사결정을 촉진
 - * 지질학적·공간적·자연 생태계 매핑 데이터, 배출량 데이터 등

■ (가스 시장의 원활한 작동 보장) 수입 천연가스 가격이 역내 가스와 전기 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장 기능 원활화를 통해 가격 변동성과 투기 완화 모색

- 시장 조작을 방지하고 투명성 부족, 정보 비대칭, 시장 집중 위험과 관련된 허점을 메우기 위해서는 에너지·금융 규제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전면적인 규제 감독이 필요
 - 이에 집행위는 역내 천연가스 시장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가스 시장 태스크포스(Gas Market Task Force)를 구성('25.2)
 - * 필요시 최적의 시장 기능을 확립하고, 시장 기반 가격제를 왜곡하는 상업적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
 - 규제 감독 강화·원활화, 에너지 및 금융 시장 규칙* 조정·강화, 에너지 금융 시장 내 거래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변경 필요성을 평가하는 이해관계자 협의 추진

* ▲(MiFID) 금융상품투자지침 ▲(REMIT) 도매 에너지 시장 무결성 및 투명성 규정

※ 이해관계자 협의에서 규제 체계, 에너지·금융 규제 기관의 공동 감독 방식, 모든 규제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되며, '25.4분기까지 보고서 제출 예정

2. 선도 시장 구축으로 청정 공급·수요 촉진

■ (배경) 제품 시장에 대한 확신이 기업 투자의 선행 조건이므로, 탈탄소화 제품 비즈니스 사례를 창출하기 위한 수요 측면의 구체적인 조치 수립 필요

- 청정 기술·제품의 역내 선도 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청정 전환 부문에서 EU의 선도적 입지를 공고화하는 한편, 주요 청정 부문의 경쟁력을 높여 관련 제품의 제조와 고용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선도 시장을 통해 규모의 경제 촉진, 비용 절감, 기업·소비자의 청정 제품 활용 용이화를 뒷받침할 수 있고, 수요 증가 시 업계의 청정·순환 생산방식 전환이 가속화되는 효과 발생

■ (공공 조달 非가격 기준과 민간 구매 인센티브) 공공 조달 정책은 시장 진입 장벽을 극복하고 역내 복원력 있는 지속 가능 산업 생태계·일자리·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수단에 해당하며, 민간 조달의 경우 대규모 수요 조성을 뒷받침

- 「산업탈탄소화촉진법」을 제정해 에너지 집약 산업에 EU산 청정 제품 공급을 촉진하는 복원력·지속가능성 기준, 저탄소 제품 라벨제도 도입
 - 순환성, 청정성, 사이버보안, 복원력과 같은 기준을 통해 EU산 청정 제품 수요가 확대되고 역내 사회·환경 표준과 혁신이 증진되며 대등한 경쟁 환경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공공·민간 조달, 각국의 지원 프로그램, EU 예산에 대한 非가격 기준* 적용을 확대
 - * 환경 지속가능성, 품질 등 공공·민간 조달 등에서 평가 기준으로 삼는 가격 외 요소
 - 라벨 제도를 확립해 ▲(제조업체) 자사 생산물의 탄소 집약도를 파악하고 선별된 인센티브의 혜택을 확보 ▲(회원국) 「국가 보조금 지급 규칙」에 따라 세제 혜택이나 기타 지원 제도를 설계 ▲(소비자) 제품의 탄소 발자국 확인 등에 활용
 - ※ 「산업탈탄소화촉진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ETS)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기반으로 제품의 탄소 강도에 대한 자발적 라벨 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며, 신속한 진행을 위해 '25년 철강 부문부터 개발에 돌입(시멘트 라벨은 건축자재규정에 따라 추진 예정)
- '26년에는 '공공 조달 프레임워크(Public Procurement Framework)'를 개정하여 전략 부문 공공 조달 시 지속가능성, 복원력, 유럽산 우대 기준을 적용
 - 개정안을 통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공공 조달 조항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통합하여 발주 기관이 이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

- 수명주기 기반의 CO₂ 배출 표준 등의 조치를 바탕으로 민간 조달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확대해 나갈 전망
- 철강, 재생에너지, 차량 배터리 셀 등의 제품 관련 법률이나 건축 법규에 非가격 기준 및 요건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평가하고, 탈탄소화 제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제품 라벨링 제도를 공공 조달과 연계해 제조업체의 제도 활용을 장려
- 다양한 탄소회계 방법론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혼란을 완화할 수 있도록 '25년 4분기까지 탄소회계 방법론을 단순화·조율하기 위한 우선 분야와 방안을 파악

■ 재생·저탄소 수소 활용 촉진) 수소는 EU 에너지 시스템, 특히 전기화가 요원한 난감축 부문의 탈탄소화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므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수

- 이에 집행위는 '25년 1분기에 저탄소 수소에 대한 위임법(delegated act)을 채택하여 실용적인 방식으로 저탄소 수소 생산 관련 규칙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들에게 확실성을 제공
- 역내 수소 제품 활용을 가속화하고 관련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25년 3분기 수소은행을 통해 최대 10억 유로의 규모의 3차 입찰 공모를 개시하고 회원국이 집행위의 '서비스형 경매(auctions-as-a-service)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장려
 - '25년 2분기 유럽수소은행 산하에 '수소 메커니즘*'이 출범하면 해운, 항공과 같이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 및 운송 부문에서 수소, 수소 유래 연료 수요를 용이하게 집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
 - * 구매자와 공급자, 참여자와 금융·위험감축 수단을 연결
- 그 외 비생물학적 재생연료에 대한 위임법 검토 준비를 위해 수소 프레임워크의 효과를 평가하고 재생수소 산업 성장 저해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개시

3. 공공 및 민간 투자 증대

■ (배경) 경제 부문의 청정 전환에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인 규제 안정성, 탈탄소화 목적의 공공 인센티브, 효과적인 정책 조정을 바탕으로 민간 자본을 동원·활용하는 것이 중요

※ EU의 청정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 혁신, 규모 확장, 운송 시스템 등에 대한 연간 투자를 지난 10년 대비 약 4,800억 유로 증액 필요

- 유럽 그린딜의 기후 관련 정책을 적극 지원해 온 EU의 예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FF)'을 통해 청정 전환을 뒷받침

*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7년 주기로 수립되는 EU의 장기 예산 계획

- 예정된 '경쟁력 기금(Competitiveness Fund)을 활용해 혁신 산업을 지원하고 EU 자금 지원 절차를 원스톱으로 단순화
 - ※ 청정 기술과 같은 부가가치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동시에 산업 탈탄소화 지원 방침
- EU 기금을 활용하여 '에너지 연합*'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와 연결성에 대거 투자하는 한편, 민간 투자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 「저축투자연합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산업 탈탄소화와 청정 기술의 주요 투자처로 자리매김
 - * (Energy Union) 러시아 가스 의존도 저감,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목표로 EU의 에너지 정책을 통합·강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 ** (strategy on a Savings and Investment Union) 저축과 투자의 연계 강화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
- 현재 자금 지원이 시급 EU 산업에 대해 단기 구제 차원에서 1,000억 유로* 이상을 동원하여 EU산 청정제조 사업 사례 개선을 도모
 - * 현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FF)에 따른 추가적인 10억 유로 보증 포함
- 청정산업딜 및 국가 지원 제도의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①EU 차원의 자금 지원 강화 ②민간 투자 활용 ③국가 보조금의 효과 제고를 위한 조치 시행

■ (자금 지원 강화) EU 혁신기금 확대, 산업탈탄소화은행 설립,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공모 등을 추진

- 「유럽전략기술플랫폼 규정*」에 따라 '주권 인증**'을 획득한 혁신기금 선정 프로젝트 지원 확대를 목표로 추가 자금 투입 방안을 수립해 혁신기금***의 효과를 증대
 - * (STEP Regulation)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럽전략기술플랫폼 (STEP) 규정
 - ** (Sovereignty Seal) 기존 EU 자금지원 프로그램 선정 시 높은 평가를 받은 프로젝트 중 STEP 목표에 부합하는 경우 수여
 - *** (Innovation Fund) 역내 산업 탈탄소화 및 청정 기술 제조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
- 이에 집행위는 혁신기금 STEP 인증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혁신기금과 각국 자금 지원 기준을 일치시켜 STEP 인증 획득 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자 하는 회원국의 국가 보조금 승인 절차를 가속화
 - * (예) 기존 자금 지원 수단 간의 시너지 강화 등
- 이를 통해 관련 절차가 명확해지고 각 회원국이 보다 많은 국가 자원을 할당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효과 발생
- 혁신기금의 자금, 배출권거래제(ETS)의 추가 수익, InvestEU 개정안을 기반으로 산업탈탄소화은행* 출범을 추진

- * (Industrial Decarbonisation Bank) 1,000억 유로 자금 조성을 목표로 하며, EU의 혁신 및 기술 투자를 위해 '미래경쟁력기금'의 거버넌스에 포함
- 산업탈탄소화은행은 산업계 배출량이 최대한 감소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할당량(ETS allowance)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 수준을 평가 지표로 설정한 프로젝트를 지원
-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등의 방식을 통해 기술 중립적 지원을 제공하며 경쟁을 거쳐 회원국 간에 지원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설계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의 가격 신호를 보완하고 자본 지출과 운영 지출 간의 격차 해소에 기여할 전망
- *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기업의 저탄소 기술 도입 및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제도
- '26년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에 앞서 금년 다양한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를 위한 10억 유로 규모의 시범 경매* 개시
- * 기존 혁신기금 자원과 서비스형 경매(auctions-as-a-service) 메커니즘을 결합하는 형태로 산업 탈탄소화와 전기화를 촉진
- 그 외 ▲'25년 혁신기금 중 60억 유로를 청정 기술, 배터리 제조, 수소은행, 산업 탈탄소화 등에 투자 ▲'26~'27년 EU 사업 계획에 따라 약 6억 유로 규모의 플래그십 호라이즌 유럽 공모를 시작해 적합한 프로젝트 지원 ▲핵융합 전략* 제안을 추진
- ※ 이를 통해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과 혁신기금 간의 시너지를 촉진하여 연구혁신 결과물을 상용화하는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구축을 도모
- * 혁신적인 탈탄소 에너지원으로서 핵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민관 파트너십 구축(PPP) 등의 조치 포함

■ (민간투자 활용) EU 차원의 주요한 민간 자금 동원 수단인 InvestEU*의 위험 부담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 * InvestEU는 유럽투자은행(EIB), 국제 금융 기관, 각국 개발은행의 협력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2,800억 유로 이상의 자금을 EU 경제에 조달
- ** (InvestEU Regulation) 역내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정으로 「옴니버스 패키지」의 일환으로 개정안 제출('25.2)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럽전략투자기금(EFSI)의 잉여금 재사용 간소화, 기존 금융 수단의 자금 재유입, 자본 지원 촉진을 도모하고, 현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FF) 종료 시까지 EU의 중점 정책*에 약 500억 유로의 추가 자금과 투자를 조달
- * 산업 공정 현대화, 청정 기술 제조·보급,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청정 모빌리티 솔루션·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등
- InvestEU 하의 기존 보증상품 일부는 유럽투자은행(EIB)이 청정기술보증제도*와 연계해 사용
- * (Clean Tech Guarantee Facility) 청정 기술 분야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보증 제도

- 집행위와 유럽투자은행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청정산업딜 특별 대상 분야 관련 신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TechEU 투자 프로그램을 전개
 - TechEU 투자 프로그램은 「경쟁력 나침반」에서 제시한 제도로, 유럽투자은행 및 민간 투자자와 협력해 혁신 지원, 역내 산업 역량 강화, 혁신 기술* 투자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
 - * AI, 청정 기술, 핵심 원자재, 에너지 저장, 양자 컴퓨팅, 반도체, 생명과학, 신경 기술 등
 - 이 외에도 탈탄소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과 같이 역내 청정 전환 투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방식을 지속적으로 개발

■ (국가 보조금 제도 간소화) 국가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재정적 뒷받침을 제공하고 탈탄소화 및 순환경제에 대한 투자 장벽을 축소

- 회원국에는 5년간의 계획 기간을, 기업에는 청정산업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청정산업딜 국가 보조금 프레임워크」를 신설하여 국가 보조금 제도를 통한 민간 투자 증진을 도모
 - 국가 보조금 규칙을 간소화시킴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과 역내 결속을 유지하고 청정산업혁약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 규칙 간소화·유연화를 통해 탈탄소화에 대한 국가 보조금 조치를 신속하게 승인하고 단일시장 내 부당한 경쟁 왜곡을 방지
 - 각 회원국이 적합성을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off-the-shelf) 수단을 도입하고, 복잡한 개별 평가 대신 보다 간소화된 방법을 광범위하게 활용
 - 풍력, 태양광 등 특정 기술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제도를 허용하는 한편,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용량 메커니즘* 등에 대한 지원을 증진하고 배터리와 같은 청정 기술 제품의 추가 제조 지원 도모
 - * (capacity mechanisms) 일정 수준의 전력 공급용량을 상시 확보하여 전력의 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한 시스템
- 「일반적용면제규정(GBER)*」을 재검토하여 기업과 회원국의 행정 부담 대폭 저감, 산업 지원 용이화 등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가 보증을 부여하기 위한 ‘보증 공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평가
 - * (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특정 분야의 국가 보조금에 대해 집행위 사전 보고·승인 의무를 면제
 - ** (Guarantee Notice) 회원국의 국가 보증 제공 시 준수해야 할 지침 제공하는 문서로, 국가 보증은 직접 보조금보다 공공 자원 부담을 줄이면서도 민간 자금 조달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집행위와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규 유럽공동이익프로젝트(IPCEI) 설계를 가속하고 산업 탈탄소화와 청정 기술 제조 지원 도구의 효율성을 강화
 - 새로운 지원 허브를 신설하여 IPCEI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유럽투자은행과 협력해 보조금 신청과 재정 구조화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원스톱 창구를 개발
- 청정산업딜의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세금 정책이 화석 연료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회원국의 법인세 체계를 활용한 청정 사업 지원을 권고
 - ▲청정 기술 자산의 감가 기간 단축으로 기업이 신속하게 비용을 상각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상쇄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청정 전환 기업에 세액 공제를 제공해 탈탄소화 투자의 재정적 유인을 강화하는 조치 등을 시행
 - ※ '25 유럽 예산회기제(European Semester)에서 화석 연료 보조금 축소 및 단계적 폐지 조치와 병행 추진될 것으로 예상
 - 이 외 혁신 기업의 성장과 투자 촉진 측면에서, 관련 규칙을 간소화하는 '28번째 법적 제도' 도입 모색
 - * (28th legal regime) 기업이 회원국 간 규제 차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동법·파산법·세법 등을 통합·간소화하기 위한 제도

4.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재·자원 접근성 확보

- (배경) 신뢰도가 부족한 역내 공급업체 노출을 대폭 줄이고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재와 2차 원자재 조달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
 - 순환성을 탈탄소화 전략의 중심축으로 설정하는 경우, 필수 자재의 접근성과 경제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자재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을 통해 의존성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현재 310억 유로 수준인 유럽 재제조 시장의 순환 잠재력이 '30년 1,000억 유로로 증대되면서 5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유럽 산업의 지속 가능성 증진, 탈탄소화 촉진, 자원 보안 강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핵심원자재법 신속 이행) 디지털·녹색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를 일부 제3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핵심원자재법」 시행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자원 접근성을 확보
 - '전략 프로젝트*' 1차 목록을 승인하여 전체 가치사슬의 공급을 다각화하고 공공·민간 재원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25.3)
 - * (Strategic Projects) 「핵심원자재법」에 따라 역내 전략 원자재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

- AggregateEU*를 참고하여 전략 원자재 수요 집계 플랫폼과 구매나-판매자 연결 매커니즘 구축하는 한편, 기업을 대리해 원자재를 공동 구매하기 위한 ‘EU핵심원자재센터 (EU Critical Raw Material Centre)**’ 설립

* 역내 가스 수요 취합, 공동 구매 매커니즘으로 '23.4월 출범

** 원자재 공동 구매 외, 재고 조정, 공급망 모니터링, EU 및 제3국의 업스트림 공급에 투자하기 위한 금융 상품 설계 등을 담당

■ (순환 경제) EU 산업이 순환경제를 선도하고 있음에도 규모의 문제나 단일시장 부재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순환경제법」 제정, 에코디자인 요건 전면 도입, 지역순환허브 구축 등을 통해 대응

- '26년 「순환경제법」을 제정해 단일시장을 기반으로 한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
 - 「순환경제법」을 바탕으로 전자 폐기물에 포함된 핵심 원자재 회수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폐기물 종료 기준*’을 조율해 폐기물의 2차 원자재 전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단순화·디지털화, 공공 조달 기준을 통한 수요 제고를 추진
 - * (end of waste criteria) 폐기물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非폐기물로 간주하여 자원이나 제품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정한 기준
 - 금속 스크랩 사용을 증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철거 허가와 철거 전 감사 디지털화를 의무화하는 한편, 「에코디자인 규정*」의 시행을 보완·촉진
 - *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 Regulation) 효율성을 강조하였던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과 달리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제품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등의 기준 추가
- 역내 순환성 증진 및 재활용 용량 증대를 목표로, 핵심 원자재 폐기물이 수출되는 대신 EU 내부에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 검토
 - 효과적인 분리수거를 통해 ‘매립’에서 ‘재사용·재활용’으로 전환되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순환경제 파트너십을 개발하고자 하는 제3국과 공조
- 재활용을 위한 스마트한 전문화 및 규모의 경제 촉진을 목적으로 ‘지역순환허브(TransRegional Circularity Hubs)’ 구축해 회원국과 경제 주체 간의 협력을 촉진
 - 순환허브는 회원국·산업계의 제안에 따라 전략 프로젝트를 식별하여 다양한 지역의 자원을 결집함으로써 지속적인 시설 운영에 필요한 규모가 달성되도록 뒷받침하는 역할 담당
- 회원국의 청정 기술용 순환 첨단 소재 분야 유럽공동이익프로젝트(IPCEI) 설계 적극 지원
- 중고품의 부가가치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 부가가치세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관련 지침(VAT Directive)을 검토하고, 「순환경제법」 준비 등의 측면에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공식 논의* 개시

* Clean Industrial Dialogue on Circularity

5. 글로벌 시장과 국제 파트너십 증진

■ (배경) 녹색 전환과 복원력,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 상당수가 역외 조달되고, 개방 무역 체제와 제3국 시장 접근성이 EU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청정산업화 달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 대두

- 기후 중립 및 전략 기술 개발·획득 과정에서 국가 간의 시장·핵심 원자재·신기술·무역 경로 확보 경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평등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EU 시장이 글로벌 과잉 생산품의 주 수입처가 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는 지경학적 경쟁 시대가 도래
- '35년 글로벌 청정 에너지 기술 시장 규모가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IEA), 시장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경쟁을 통한 기후중립 달성에 중요

■ (청정무역투자파트너십) 제3 시장과 필수 투입물에 대한 유럽 기업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정무역투자파트너십 (CTIP)'을 발족해 FTA를 보완

- 청정무역투자파트너십은 기업의 필요와 기회를 고려해 EU의 역외 활동을 산업 정책 목표에 부합시킬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며 전략적 종속성 관리, 공급망 다각화, 원자재·청정 에너지·청정 기술 접근성 확보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내 EU의 입지 공고화에 초점
- 에너지 기술과 청정 전환 정책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고 협력국의 탈탄소화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규칙, 규제 협력, 투자를 결합해 협력국과 전략적 청정 가치사슬 개발을 모색
 - ※ 3월 첫 번째 청정무역투자 파트너십(CTIP) 발족 예정
 - (투자) 글로벌 게이트웨이* 투자를 바탕으로 민간·공공 자금을 결합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파악해 투자 동원
 - * (Global Gateway) EU 회원국, 금융기관, 민간 부문의 장기적인 역외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
 - (규칙) EU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도 대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정 투자 및 청정 사업 기회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뒷받침
 - (규제 협력) 협력국의 청정 기술, 전기화, 순환성, 탈탄소화 표준, 탄소가격제 구축 지원

■ (CBAM 개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효과 증대를 목표로 제도를 대폭 단순화하여 업계와 공급망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전 세계 탄소가격제 도입을 장려

- '25년 하반기 CBAM 범위를 EU 배출권거래제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평가하는 종합 검토 보고서 제출
 - 보고서에는 역내 제조사의 전기 간접비용을 고려하여 CBAM 전 부문에 간접 배출량을 포함시킬지의 여부 평가 및 우회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 포함

- 제3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탄소 누출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해 '26년 상반기 법안을 제출하고, 기술 지원 및 규제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국의 탈탄소화 노력을 뒷받침
 - 최근 출범한 국제탄소시장 및 탄소가격제외교태스크포스*를 통해 협력국이 탄소가격 정책과 국제 탄소시장 접근방안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 세계 탄소가격제 및 탄소 시장 발전을 촉진
- * (Carbon Pricing Diplomacy Task Force) 협력국의 탄소가격제 정책 개발 지원 이니셔티브

■ **(공평한 경쟁 환경 조성) 산업계 이해관계자, 회원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외국인의 EU 투자가 역내 산업의 장기 경쟁력, 기술 우위, 경제 복원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요 조치 제안**

- 외국인 투자가 포함된 프로젝트의 조건을 공동으로 고려하고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심사 체계 강화
 - 공적 자금이 투입된 외국인 투자자 참여 프로젝트에 대하여, 장비 소유권, EU산 투입물, EU 직원 채용, 합작 투자·지식내산 이전 필요성 등의 조건을 회원국 집단적으로 검토 가능
 - ※ 자동차, 재생에너지 제조와 같은 전략 부문부터 검토 시작 전망
 - FDI 심사 규정을 검토하여 회원국별 심사 체계 간의 차이 완화, 복원력 요건 도입, 정책·접근방식 조율을 추진하고 포럼 쇼핑*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심사 체계 강화
 - * (forum shopping) 소송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 관할지를 선택해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 '26년 1월까지 역외보조금규정(FSR)*의 핵심 개념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채택
 - *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시장을 왜곡하는 제3국 정부의 보조금을 규제
 - 일정 기준을 넘어서지 않더라도 단일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협하는 기업 합병 건이 역외보조금규정에 따라 검토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전력 부문에 대해서는 역외보조금규정 직권 조사를 허용
- 경쟁력, 복원력, 지속 가능성 목표에 따라 환경 보호와 같은 예외 사유를 활용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관세를 조정하는 방안 검토
 - 필요한 경우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와 같은 무역방어제도(TDI)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직권 절차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
 - 회원국,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무역방어제도를 완성·개혁하기 위한 추가 수단 도입 여부를 논의
- 핵심 상품·기술의 무역 패턴과 주요 산업을 왜곡하는 보조금 등의 비시장적 조치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결하고 글로벌·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과잉 생산능력 문제에 대처
 - 이와 관련해 G7내에서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자율적 대응과 집단적 조치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보 교환 추진

6. 공정 전환을 위한 스킬 및 양질의 일자리 지원

■ (배경) 숙련 인력 확보가 중요한 EU 산업계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필수적

- 근로자와 지역사회 중심의 산업 변혁 추진, 인재 활용, 스킬 개발은 청정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

■ (스킬 지원) 근로자의 스킬 구비 및 고용주의 전문 인력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적인 스킬 전략으로서 ‘스킬 연합(Union of Skills)’ 출범

- 청정산업딜과 연계된 전략 산업의 스킬 강화 프레임워크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라스무스+를 통해 최대 9,000만 유로를 투입해 각 부문 스킬 이니셔티브*에 대한 EU 지원 모델을 검토

* 스킬 협정(Pact for Skills), 견습연합(Alliance for Apprenticeships), 직업우수센터(Centres of Vocational excellence) 등

- 스킬 연합은 투자, 성인·평생 학습, 직업 교육·훈련, 고등 교육, 스킬 유지·인정, 제3국의 적격 인재 유치·통합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스킬 인텔리전스* 강화를 도모
- * (skills intelligence) 근로자의 역량 파악·추적·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 접근방식
- 스킬 인정 문제 대응 차원에서 관련 절차 간소화·단순화 및 디지털 툴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스킬 이동성 이니셔티브(Skills Portability Initiative)’를 통해 한 국가에서 습득한 스킬이 타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전환기 근로자 지원) 「양질의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해 전환기에 있는 근로자 지원, 유럽세계화기금 지원 확대, 유럽공정전환관측소 설립 등 추진

- 인재 유치 및 유럽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회원국과 업계가 적정 근무 조건, 높은 보건안전 기준, 근로자·자영업자의 공정한 일자리 전환 및 단체 교섭 전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로드맵(Quality Jobs Roadmap)」 수립
- 전환기 근로자 지원 측면에서 집행위와 사회적 파트너가 EU 및 회원국 차원의 구조조정 절차 지원 프레임워크를 논의
- 공정 전환, 변화 예측, 구조 조정 위협 발생 시의 신속한 개입, 정보·협의 체계 개선 등에 초점
- ‘유럽세계화기금*’의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작업을 위해 ‘유럽공정전환 관측소(European Fair Transition Observatory)’ 설립

* (European Globalisation Fund) 세계화로 인한 구조조정 등의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 관측소는 ▲녹색 전환의 공정성 증거 기반 강화 ▲표준화된 지표 개발 ▲모범 사례 수집 ▲데이터* 공유 촉진 ▲사회적 파트너, 지역·지방 당국, 시민사회, 기타 이해관계자 등과의 공정 전환에 대한 논의 보장 등을 지원
 - * 고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직업 간 전환, 노동력 리스킬링, 투자 수요, 사회적 보호, 필수 서비스 접근성 관련 영향과 성과 측정용 데이터
- 공정전환기금(JTF) 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도시 지역의 인력 이동성 문제 대응 차원에서 「유럽주택구매가능성개선계획(European Affordable Housing Plan)」을 수립
 - * (Just Transition Fund) 탄소중립 전환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 지역·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 「일반적용면제규정」 검토의 일환으로, 공정 전환 차원에서 산업계의 업스킬링·리스킬링, 양질의 일자리, 근로자 채용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국가보조금 규칙」 개정 타당성과 구체적 방안을 평가
- 무배출 차량, 히트펌프, 기타 청정 제품의 사회적 임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시민의 청정 제품 이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요를 촉진

Ⅲ. 결론 및 시사점

■ '90년~'25년 동안 EU의 순온실가스 배출량이 37% 감소한 반면 GDP는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탈탄소화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자 기회로 작용

- EU는 탈탄소화와 순환성을 경제 정책의 중심축으로 설정해 자원 부국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청정산업딜을 수립
 - 청정산업딜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에너지 집약 산업 ▲청정 기술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체 가치사슬을 고려해 에너지 비용 절감, 청정제품 수요 증대 등을 중심으로 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
 - 이를 위해 ①에너지 가격 안정화 ②청정 제품 공급·수요 촉진 ③공공·민간 투자 증대 ④순환성·자원 접근성 확립 ⑤국제 파트너십 증진 ⑥스킬 및 양질의 일자리 지원의 6대 핵심 정책 방향과 세부 조치를 제시

〈표 1〉 청정산업딜 전략 목표와 핵심 조치

구분	핵심 조치
에너지 가격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I) ①경제 전반의 전기화율을 현 21.3%에서 '30년 32%로 확대 ②'30년까지 매년 100GW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에너지가격실행계획 ('25년 1분기) - 중소기업, 에너지 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전력구매계약(PPA) 구매촉에 금융 보증을 제공하는 유럽투자은행(EIB) 시범 프로그램 실시 ('25년 2분기) - 가스재고비축 규정 연장 제안 ('25년 1분기) - 청정산업딜 국가 보조금 프레임워크 ('25년 2분기) - 전력망 비용 권고안 ('25년 2분기) - 산업탈탄소화촉진법* ('25년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계의 에너지 활용 인허가 및 산업 탈탄소화 촉진 - 에너지 과세에 대한 권고안 ('25년 4분기) - 차액계약제도(CfD) 설계 지침 ('25년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액계약제도(CfD)와 전력구매계약(PPA) 간 결합 포함 - 소매 계약의 전력 소비 유연성 보상 지침 ('25년 4분기) - 유럽 그리드 패키지 ('26년 1분기)

구분	핵심 조치
<p>선도 시장 구축으로 청정 공급·수요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I) ❶ EU 시장 내 청정 기술 제품의 역내 생산 부품 비율 40% 달성 ❷ 청정산업딜에서 명시한 제품의 외부취약성지수(EXVI) 저감 - 저탄소 수소 관련 위임법 ('25년 1분기) - 산업탈탄소화촉진법을 기반으로 ▲저탄소 제품 라벨 ▲저탄소 제품 시장 선도를 위한 전략 부문의 공공·민간 조달에 지속 가능성·복원력·EU산 부품 최저 사용 요건 도입 ('25년 4분기) - 기업용 차량의 친환경화에 대한 계획안 및 입법 제안 ('25/'26년) - 非가격 기준 사용의 주류 편입을 위한 공공조달지침 개정 ('26년 4분기)
<p>공공 및 민간 투자 증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I) 산업 전환 위한 총 투자 규모를 현 527억 유로 이상으로 증액 - InvestEU의 위험 부담 역량 증대 ('25년 1분기) - 유럽공동이익프로젝트(IPCEI) 설계 지원 허브 ('25년) - 청정산업딜 국가 보조금 체계 ('25년 2분기) - 청정산업딜 지원을 위한 회원국의 세제 혜택 도입 권고안 ('25년 2분기) - 호라이즌 유럽에 따른 플래그십 이니셔티브 공모 ('25년 4분기) - 혁신기금 내 시범 경매 ('25년) - 산업탈탄소화은행 ('26년 2분기) - TechEU 투자 프로그램 ('26년)
<p>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재·자원 접근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I) 순환 재료 사용률을 현 11.8%에서 '30년 24%로 확대 - 「핵심원자재법」에 따른 전략 프로젝트 1차 목록 ('26년 4분기) - 에코디자인 작업계획 채택 ('26년 4분기) - 전략 비축물자의 공동 구매·관리를 위한 EU 핵심원자재 센터 ('26년 4분기) - 순환경제법 ('26년 4분기) - 청정 부가가치세 이니셔티브 ('26년 4분기) - 지역순환허브 ('26년 4분기)
<p>글로벌 시장과 국제 파트너십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번째 청정무역투자파트너십 협상 개시 ('25년 1분기)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간소화 ('25년 1분기) - CBAM 종합 검토 ('25년 3분기) ※ 탄소 누출 위험이 있는 EU ETS 부문, 다운스트림 부문, 간접 배출로의 CBAM 범위 확대 및 수출업체 지원을 통한 허점 보완 가능성 평가 - 범지중해 에너지·청정 기술 협력 이니셔티브 ('25년 4분기)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대 입법 제안 ('26년 1분기) - 역외보조금규정(FSR) 가이드라인 ('26년 1분기)

구분	핵심 조치
공정 전환을 위해 스킬 및 양질의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I) 녹색 전환에 특정 스킬·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종 중 최소 5개 회원국에서 인력 부족을 보고한 직종의 수('24년 기준 27개)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킬연합 ('25년 1분기) - 양질의 일자리 로드맵 ('25년 4분기) - 청정 제품의 사회적 임대 가이드라인 ('25년) - 유럽공정전환관측소 ('26년 1분기) - 스킬 이동성 이니셔티브 ('26년) - 사회적 기업과 취약 근로자 채용을 위해 국가 보조금 규칙의 일반적용면제규정(GBER) 검토 ('27년 4분기)

■ **집행위는 금년 초 「경쟁력 나침반」('25.1), 「청정산업딜」('25.2), 「옴니버스 패키지」('25.2)를 연이어 발표하며 탄소중립 기조를 이어나가면서도 환경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¹⁾**

- 이 중 「청정산업딜」은 「EU 그린딜」('19.12)의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되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에너지 비용 감축 등을 통해 역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 로드맵에 해당
 - EU의 기존 정책 기조를 지속시켜 나가는 가운데 중소·중견 기업을 비롯한 역내 기업을 보호하며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진화한 것으로 분석²⁾

■ **EU가 전 세계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며 청정기술과 관련 제조 분야의 주도권 확보 및 산업 경쟁력·경제 안보 강화를 도모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³⁾**

- 현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에 입각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및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산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 미흡
 -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50년 탄소중립 사회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과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10대 부문의 37개 감축 정책 과제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기반 과제 등을 제시

1) 한국금융연구원, 유럽의 ESG 규제 간소화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2025.3.18

2) 영남일보, EU, 그린딜에서 청정산업딜로 진화하다, 2025.3.14

3) 국회미래연구원,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산업 전략 연구, 2024.12.30

- 탈탄소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후 정책과 산업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에너지 집약 산업의 탈탄소화 및 청정 기술 육성을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전략 육성이 필요
- 청정제품 시장 구축, 금융 지원제도 개선, 인력 양성 등 EU 「청정산업딜」의 주요 조치를 국내 상황에 맞게 반영하여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
 - 국내 청정 제품 시장 구축 및 수요 창출이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공공 부문의 녹색 제품 조달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의 청정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정책 인센티브를 강화
 - ※ 친환경 제품의 공공조달 의무화, 한국형 탄소발자국 라벨 제도인 탄소성적표지제 강화 등을 통해 청정 제품의 시장 경쟁력 제고 모색
 - 청정 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EU 혁신기금, 산업탈탄소화은행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기후대응기금* 및 녹색 금융 활성화, 탄소중립 분야 세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
 - *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마련된 기금
 - 정부의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 공고화 및 관련 기술과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
 -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EU 스킬연합 등을 참고하여 산업별 직무 전환 교육, 인력 양성, 취약 지역·계층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 필요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발간현황

2025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25-01	인공지능(AI) 시대 인력 개발의 미래	2025.01
2025-0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산업 정책 방향	2025.02
2025-03	EU 청정산업딜 정책 조치	2025.03

2024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24-01	영국 배터리 전략	2024.01
2024-02	수소의 현실적 한계와 대응 정책 고찰	2024.02
2024-03	일본 바이오 산업 과제와 정책 대응 방향 고찰	2024.03
2024-04	디지털 배터리 여권 시행에 따른 기회와 과제 고찰	2024.04
2024-05	미국 반도체 산업 인력 정책 제언	2024.05
2024-06	일본 자동차 산업의 모빌리티 DX 전략	2024.06
2024-07	일본 통합혁신전략 2024	2024.07
2024-08	글로벌 생성형 AI 특허 현황	2024.08
2024-09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혁신 현황	2024.09
2024-10	ASPI 핵심 기술 연구 성과 모니터링	2024.10
2024-11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한계 고찰	2024.11
2024-12	핵심광물 재활용 확대 전략 고찰	2024.12

■ 2023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23-01	미국 바이오제조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2023.01
2023-02	중국 산업 디지털화·친환경화 통합 발전 제언	2023.02
2023-03	유럽 넷제로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계획	2023.03
2023-04	EU 전략기술 공급망 분석 및 재료 수요 예측	2023.04
2023-05	미국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의 비전과 전략	2023.05
2023-06	주요국 반도체 정책과 미 의회 역할 검토	2023.06
2023-07	글로벌 자율주행 정책 및 산업 동향	2023.07
2023-08	글로벌 핵심 광물 시장 동향	2023.08
2023-09	글로벌 원자력 보급 과제와 대응 조치 고찰	2023.09
2023-10	중국 기술 정책 현황 및 미국의 대응 방향	2023.10
2023-11	EU 우주, 방위 및 관련 민간 산업의 미래 핵심 기술 분석	2023.11
2023-12	미국 핵심·신흥기술 수출통제 조치 고찰	2023.12

■ 2022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22-01	OECD, 국경을 초월한 정부 혁신 달성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2.01
2022-02	2022 글로벌 에너지 의제	2022.02
2022-03	일본 에너지 기반 산업의 녹색전환(GX) 방향성	2022.03
2022-04	2050 미래 우주 공간 활용 : 영국 국가우주전략의 새로운 기회와 위협	2022.04
2022-05	영국 에너지 안보 전략	2022.05
2022-06	유럽 청정에너지 전환에 따른 금속 수요 전망 및 대응	2022.06
2022-07	주요국 제조업 디지털화 정책 추진 현황	2022.07
2022-08	인도-태평양 지역의 수소 개발 비전과 주요 정책 동향	2022.08
2022-09	중국 CCUS 실증·보급 현황 및 정책제언	2022.09
2022-10	미국 에너지부 산업 탈탄소화 로드맵	2022.10
2022-11	미국 첨단제조 국가 전략	2022.11
2022-12	글로벌 인재 이동 동향 및 시사점	2022.12

2021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21-01	유럽 녹색산업정책을 위한 제언	2021.01
2021-02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전략 제언	2021.03
2021-03	기후 주도 무역 아젠다를 위한 제언	2021.04
2021-04	중국 14.5규획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5
2021-05	산업단지의 순환경제 도입 현황 및 전망	2021.06
2021-06	유럽 그린딜에서의 인공지능 역할과 시사점	2021.07
2021-07	미국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① : 반도체 및 배터리	2021.07
2021-08	미국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② : 핵심 광물·소재 및 의약품	2021.08
2021-09	유럽 첨단기술 동향 및 차세대 신흥기술 확산 전망 고찰	2021.10
2021-10	OECD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달성을 위한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11
2021-11	IEA 글로벌 수소리뷰 2021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12
2021-12	CX2030 가상현실에 의한 '30년 커뮤니케이션 전환	2021.12

2020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20-01	주요국의 연구개발 전략 분석 : 유럽연합(EU)·영국·독일·프랑스	2020.01
2020-02	일본, 제 11차 과학기술예측조사를 통해 본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의 미래상'	2020.02
2020-03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미국의 리더십 확보 전략 : AV 4.0	2020.04
2020-04	주요국 규제 사례를 통해 본 혁신 친화적 규제 접근방식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0.04
2020-05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OECD의 분야별 정책 권고 주요 내용	2020.06
2020-06	혁신 창출 환경 및 주요 산업별 혁신 변화의 추이와 전망	2020.07
2020-07	영국의 넷제로(Net-Zero)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인력 정책 방향 제언	2020.08
2020-08	EU·독일·호주 수소전략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0.08
2020-09	최근 미국과 중국 AI 정책동향 및 시사점	2020.09
2020-10	연구개발·혁신 파이낸싱 동향과 정책 과제	2020.10
2020-11	글로벌 반도체 산업 동향과 미국의 국가 간 공조를 통한 산업 발전 방안 제언	2020.11
2020-12	디지털 시대의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	2020.12

■ 2019년

호수	제목	발간연월
2019-01	「미국 혁신 촉진을 위한 투자수익 이니셔티브」 복서 초안	2019.01
2019-02	주요국 연구자금 지원기관 조직설계 및 거버넌스	2019.02
2019-03	중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연구개발 동향	2019.03
2019-04	독일의 포괄적인 AI 생태계 조성 전략	2019.05
2019-05	일본의 인공지능(AI) 정책 동향	2019.05
2019-06	OECD 국가의 디지털 혁신 정책 현황	2019.06
2019-07	중국 : 산업 및 혁신강국으로의 도전과 전망	2019.07
2019-08	영국의 전기자동차 스마트 충전기 보급방안	2019.08
2019-09	Horizon Europe(2021-2027)의 산업혁신 프레임워크	2019.09
2019-10	AI 산업 및 국가별 정책 동향	2019.11
2019-11	주요국의 R&D 예산 및 투자 전략(Ⅰ) : 미국의 NITRD와 EU의 다년도 지출예산(안)을 중심으로	2019.12
2019-12	주요국의 R&D 예산과 투자 전략(Ⅱ) : R&D 및 기업지원 예산을 중심으로	2019.12
2019-13	주요국의 R&D 전략과 예산배분 시스템, 기술분야별 연구개발 전망	2019.12
2019-14	주요국의 연구개발 전략분석 : 미국·일본·중국·인도	2019.12

※ ~ 2025년 현재까지 발간물은 KIAT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열람 가능

kiat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KIAT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Brief

발행일	2025년 3월
발행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단 기술동향조사실
발행인	민병주 원장
기획/진행	문희수 실장, 정휘상 선임연구원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산업기술정책단 기술동향조사실 02-6009-3593 www.kiat.or.kr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본 자료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반드시 원문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EU 청정산업딜 정책 조치